
	<h1>보도자료</h1> <h2>브리핑 시(14:00)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-	--

작성 부서	(금융위·금감원)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,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, 은행감독국, 저축은행감독국, 상호저축은행감독국, 보험감독국, 금융투자감독국 (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)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신탁중앙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금융투자협회, 주택금융공사			
책임자 / 담당자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		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	
	(총괄) 성기철 과장 / 송용민 사무관(2156-9771) 조성래 국장 / 원대식 부국장(3145-5688)		-	
	(은행) 류찬우 국장 / 민봉기 팀장 (3145-8035)		여신제도부 심현섭 부장(3705-5704)	
	(저축) 장병용 국장 / 정두희 팀장 (3145-6774)		법규제도부 이경연 부장 (397-8620)	
	(상호여전) 박상춘 국장/김정곤 부국장(3145-7552) 정용걸 팀장 (3145-7447)		금융부 김민기 부장 (2011-0711) 자산운용지원부 임우택 부장(042-720-1360)	
	(보험) 진태국 국장 / 박진해 팀장 (3145-7476)		소비자제도부 김인호 부장 (2262-6645) 경영지원부 박준규 부장 (3702-8571)	
	(금투) 조국환 국장 / 유진혁 팀장 (3145-7610)		소비자보호실 김형기 실장 (2003-9420)	
배포일	'15. 9. 16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7매

제 목 :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.
 - 내년부터 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
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
 →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, 대출기록 삭제 가능

1. 추진 배경

-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,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·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
 -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,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*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
 - *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,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
-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 전문가, 소비자단체,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
 - * 금융협회·금융당국 공동TF 운영('15.1~3월), 금융전문가,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(금융연, '15.5월), 금융개혁회의 보고('15.9.10)
- 오늘(9.16일)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“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”을 마련하여 발표

2. 주요 내용

- ◆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·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
 -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
- ◆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*을 수용하되,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
 - *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내 서면등으로 행사, 원리금과 부대비용 정산 의무 등
 -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

1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

-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(cooling-off period)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

<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>

-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,
 - (i)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(부대비용 포함)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
 - (ii)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

< 대출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 >

- World Bank, G20/OECD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
-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·운영중이며, 미국, 캐나다 등도 기시행

< 관련 국내 동향 >

-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
 - *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(강석훈 의원안, 이종걸 의원안 등)

② [적용 대상] 개인 대출자

□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**순수 “개인 대출자”**

*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출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,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

③ [적용 대출]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 (신용 : 4천만원 ↓, 담보 : 2억원 ↓)

① (적용범위) 리스*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

*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

※ 보험계약대출은 (i)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, (ii)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

② (대출규모 한도설정)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한도를 제한하되, 서민·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

① (신용대출: 4천만원)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(4,095만원, '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) 등 감안 →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%가 해당('14년 신규대출액 기준)

② (담보대출: 2억원) 서민주택 대출한도(디딤돌, 2억원) 등 고려 →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%가 해당('14년 신규대출액 기준)

④ [행사 절차]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내 서면 등으로 행사

① (행사개시 시점) ①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, ②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 가능

* 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계약서류 발급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(7일)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

② (행사가능기간·방법) 7일(calendar day) 이내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

⑤ [행사 효과] 원리금 상환 + 부대비용 반환

① (효과 발생시점) 발송주의

- 당해 금융회사 본·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철회 효과 발생

*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·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

② (행사 효과) 원상회복의무 (원리금 상환+부대비용 반환)

- (원리금 상환)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후 일정기간 내 원금, 약정이자(대출기간 동안)를 금융회사에 상환

- (부대비용 반환)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*을,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**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

*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, 세금 등

** 한도약정대출(마이너스 대출)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

⑥ [신용정보관리 및 악용 방지] 대출기록 삭제 등

① (신용정보관리) 대출철회시 금융회사·신용정보집중기관·CB 등의 대출정보 삭제

- 원리금 미상환자,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

② (악용 방지) 부채증명서 발급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

⑦ [도입대상 금융회사] 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

① (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: 도입) 은행, 금투, 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신탁, 주택금융공사

- 감독당국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*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 추진

* 대부업법 경과규정에 따라 감독당국 검사·감독대상이 되는 '16년 하반기중 추진

② (우체국·새마을금고, 농·수협 단위조합 등 : 제외) 향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유도

3. 기대 효과

□ (금융소비자)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

-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 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→ 불필요한 대출 방지, 가계건전성 유지
-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

<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- ①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. 하지만, **대출금의 1.5% 수준 (3백만원)인 중도상환수수료**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.
⇒ A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A씨는 원리금, **금융회사가 대출과정에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(약 150만원)만 반환**하면 대출계약에서 탈퇴 가능
- ②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C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, 며칠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.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**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** 걱정하고 있다.
⇒ B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B씨의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**대출기록도 삭제되어 B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** 됨

□ (금융회사)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

-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, 수수료 등 제시
-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

4. 향후 일정

□ 9~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(금감원·업권별 TF 운영)

- 약관개정·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, '16년부터 시행

<참고> 청약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

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 「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」 참조

참고

청약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

□ 원상회복의무 : 원리금 상환 + 부대비용 반환

	상환(반환)			정해진 기간내 미상환시
	주체	내용	시기	
① 원금 + 이자	소비자	원금 + 약정대출이자 (대출기간동안)	철회권 행사일부터 일정기간 내 * 일정기간 (예: 3영업일)은 약관에서 정함	(금융회사) · 미상환자를 채무불이 행자로 신용정보 등록 · 부당이득반환청구* * 지연약정이자(미상환기간 동안 대출이자) 포함
② 부대 비용	소비자	근저당설정비 등	금융회사가 원리금 받은날부터 일정기간 내	(소비자·금융회사) · 부당이득반환청구* * 지연약정이자(미상환기간 동안 대출이자) 포함
	금융회사	한도약정설정수수료 등		(금융회사) · 미반환자를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등록

* (예) 반환대상 부대비용 및 반환주체(담보대출 기준) (단위: 만원)

부대비용 (예시: 1억원/2억원 담보대출)	계약당시 부담주체		철회권행사시 반환주체
	금융회사	소비자	
① 인지세 (7/15)	1/2	1/2	소비자*
②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(2.4)		○	-
③ 등록면허세 (24/48)	○		소비자
④ 지방교육세 (4.8/9.6)	○		소비자
⑤ 등기신청수수료 (1.5/1.5)	○		소비자
⑥ 감정평가수수료 (47.5/69.5)	○		소비자
⑦ 법무사 수수료 (17.1/17.1)	○		소비자
· 한도약정설정수수료 등		○	금융회사

* 인지세 중 금융회사 부담분은 소비자가 부담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